



박종민 비서관 010-6477-2070

양이원영 의원, “기준금리 3% 올라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구제할 대책 시급”

- 양이원영 의원 “소진공, 소상공인 지원방안 조차 없어”
- 양이원영 의원 “신속한 채무조정 위해 현실적 대책 마련해달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2.5% 포인트에서 3%로 인상된 경우인 ‘빅스텝’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등급 변화와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 생태계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빅스텝이 고물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겠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주고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더 늘려준다던가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러·우 전쟁으로 인한 환율·물가·금리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상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실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부채로 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2.5%에서 3%로 인상됨에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무려 124만명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금융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져 호응을 얻지 못하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한편, 해당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정은애 연구위원은 "전체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에 전파되는 파장 또한 크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부실은 가계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실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